Issue Report

Vol. 2015-지역이슈-02 (2015. 4.22)

해외경제연구소

2015년 중국 전인대 이후 경제전망 및 시사점

Ⅰ. 2015년 전인대 주요 내용 ····· 1

Ⅱ. 중국의 2015년 주요 경제목표 ····· 3

Ⅲ. 2015년 경제·사회 발전계획 8대 중점업무 ····· 5

Ⅳ. 2015년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소와 정부의 대응·· 8

Ⅴ. 시사점 ····· 10

확인 : 팀 장 김영석 (6255-5707)
claudio@koreaexim.go.kr

작성 : 조사역 박두정 (6255-5709)
pdj@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 2015년 전인대 주요 내용

□ 2015년 경제운용 목표와 계획 제시

○ 3월 3일~15일 동안 개최된 제12기 3차 양회*에서 2015년 중국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운용 목표와 계획을 제시함[1].

* 중국의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 최고의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지칭함

○ 전인대 개막에 앞서 배포된 정부공작보고서(政府工作報告)에서 중국정부는 201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제시함.

□ 뉴노멀 시대 진입 공식 선언

○ 2015년 전인대를 통해 중국정부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되었음을 공식 선언함.

- 정부는 경제개혁 추진을 위해 과잉생산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그림자금융 및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고 고용이 불안해질 경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여 7% 성장은 고수하겠다는 의지 표명함.

○ 이를 위해 경제·사회 발전계획 8대 중점업무를 수립하고 경제사회발전의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함.

- 8대 중점업무는 내수촉진, 경제구조 개혁, 대외개방 확대, 농업개발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경제 개발, 환경보호, 민생개선 등임.

○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중고속·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설정하고, 경제구조 개혁과 산업고도화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

1) 주요한 정책은 해당 정책연도의 전년도 9월 경 공산당 중앙전회와 12월 경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협의하지만, 주요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으며 이듬해 3월 경에 개최되는 양회에서 공개됨.

Ⅱ. 중국의 2015년 주요 경제목표

□ 중고속·지속성장을 위해 2015년 GDP 성장률 목표를 11년 만에 가장 낮은 7.0%로 설정

○ 시진핑 정부는 제12기 3차 양회(兩會)에서 신창타이(New Normal, 新常態)[2] 시대를 맞아 경제개혁의 방향을 중고속·지속가능한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고 GDP 성장률을 전년 대비 0.5%p 낮은 7.0%로 설정함.

- 특히, R&D 투자 및 고부가가치 산업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소비량과 화학물질 배출량을 전년 대비 각각 3.1%, 2% 감축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지속성 제고를 추구함.

□ 물가상승률과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각각 3.0%, 2.3%로 설정

○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수요 부진에 따른 과잉설비 문제 등을 고려해서 물가상승률 목표는 전년보다 0.5%p 낮은 3.0%로 조정함.

○ 2015년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각각 15.53조 위안, 17.15조 위안으로 추정하여 정부의 재정적자 수준은 전년 대비 2,700억 위안 증가한 1.62조 위안*(GDP 대비 2.3%)으로 편성함.

* 중앙정부 재정적자 1.12조 위안, 지방정부 재정적자 0.5조 위안으로 구성

-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 프로젝트는 억제하되 삼농(농업, 농민, 농촌) 문제 해소, 민생개선, 환경보호, 낙후지역 개발, 소수민족 및 저소득층 보호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지출을 단행할 예정임.

- 또한, 정부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예산관리 및 재정운영 능력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

2)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 또는 질서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

<표 1> 뉴노멀과 신창타이 비교

	미국과 유럽의 '뉴노멀'	중국의 신창타이
주창자	무하마드 엘 에리언 PMCP CEO(200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2014년)
특징	저성장, 고실업률,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의 경제적 역할 축소 등이 동시에 출현	성장둔화 현상이 먼저 나타나고, 구조 변화가 느리게 진행하는 가운데 리스크와 불확실성 지속
성격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상황에 대한 묘사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상황 및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혁

자료: LG경제연구원

<표 2> 2015년 주요 경제정책 목표

(%, 만 명, 억 위안)

	2015년 목표	2014년		2013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경제성장률(내외)	7.0	7.5	7.4	7.5	7.7
물가상승률(내외)	3.0	3.5	2.0	3.5	2.6
도시신규고용(이상)	1,000	1,000	1,322	900	1,310
도시실업률(이하)	4.5	4.6	4.08	4.6	4.07
수출입증가율(내외)	6.0	7.5	3.5	8.0	7.5
고정자산투자증가율	15.0	17.5	15.7	18.0	19.6
소매판매증가율	13.0	14.5	12.0	14.5	13.1
M2증가율(내외)	12.0	13.0	12.2	13.0	13.6
재정수지적자	16,200	13,500	11,312	12,000	11,002
재정적자/GDP(%)	2.3	2.1	1.8	2.0	1.9

자료: 국무원 정부업무보고,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통계국. (한국은행 재인용)

□ 과도한 확장이나 긴축을 지양하고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유동성 유지 등을 위해 신중한 통화정책을 운용

○ 2015년 통화량(M2)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 대비 1%p 낮춘 12%로 설정하였으나, 정부의 정책변화(경제성장률 목표 상향, 경기부양책 확대)에 따라 추후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

○ 통화량·금리를 적절히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대출금리를 설정함으로써 조달 비용 경감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영세기업, 삼농, 중서부지역, 국유기업 합병 및 재조정 부문 등에 대한 신용공급도 촉진할 계획임.

○ 부동산시장, 지방정부 채무, 그림자금융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점진적 금리자유화 및 위안화 환율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제도 개선, 금융상품의 경쟁적 가격결정 유도, 적정 범위내 환율 변동폭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Ⅲ. 2015 경제·사회 발전계획 8대 중점업무

▣ 중국 정부는 이번 2015년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8대 중점 업무[3]를 제시하여 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구축 ② 대외개방 확대 ③ 사회·지역 불평등 완화 ④ 환경보호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전망임.

□ 내수촉진, 공공부문 개혁,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구축 추진

○ 정부는 수출지향형 성장 모델에서 탈피하기 위해 임금인상, 사회복지제도 확대, 소비환경 개선 등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음.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회복지제도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국민소득 수준 향상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소비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임.

* 중국 정부는 소비재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5년에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공조 강화, 중앙·지방 정부의 예산 공개 등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개발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개혁 등을 추진해 정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가시킴.

○ 2015년 GDP 대비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2.2%로 설정하고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혁신지구(National Innovation Demonstration Zones) 설립,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임.

○ '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 전략[4]을 실행하고 생체의학, 최첨단장비, 신소재 등 혁신산업 및 전략신흥산업(Strategic Emerging Industries)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함.

---

3) 중국정부는 이번 국민경제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에서 아래와 같이 8대 중점업무를 발표함

<표 3> 2015 사회발전계획 8대 중점업무

중점업무	세부내용
(1) 내수촉진	소득수준 향상, 건전한 소비환경 구축, 민간투자 촉진
(2) 경제구조 개혁	정부 투명성 강화, 재정·세재, 금융서비스 등 개혁
(3) 대외개방 확대	해외자본 유입 활성화, 대외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촉진, 경제협력 강화
(4) 농업개발 촉진	농업지원책 및 농업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5)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신흥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지원
(6) 지역경제 개발	성장 소외지역 개발, 신도시화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
(7) 환경보호	생태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환경·기후변화 대책 마련
(8) 민생개선	고용안정 추구, 사회보장제도 개선, 주택보조금 제공

자료: 2015년 국민경제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 전인대(NPC)

4) 제12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처음으로 발표한 전략으로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2030년까지 독일과 일본을 추월한다는 계획임.

□ 중국의 수출과 대외투자 확대 및 해외자본 유입 촉진을 통해 대외 개방도 지속 확대

○ 중앙·지방 정부의 수출 환급금 공동 부담 시스템 개선, 중국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 수출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함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금융자문, 법률상담,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 지원, 중요사업(철도, 항만, 원전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신산업, 환경보호, 생태계보전사업에 대한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함.

* 중국 정부는 2015년 비금융 해외직접투자액을 전년 대비 10% 증가한 1,130억 달러로 추정

○ 해외자본 유지를 위해 자유무역시범구(상하이, 톈진, 광저우, 푸젠) 활성화, 서비스·제조업 개방 확대, 외채관리제도 개편, 투자설립전 단계(Pre-establishment)의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NT)[5] 및 외자투자허가 특별관리대책(네거티브 리스트)[6] 제도 개선, 해외투자 절차 개선 등을 시행할 계획임.

* 중국 정부는 2015년 비금융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과 비슷한 1,200억 달러로 추정

○ 동시에, 新실크로드(一帶一路)[7], 중-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China-ASEAN Free Trade Zone)[8],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지역경제 개발, 사회보장제도 개선, 농업개발 촉진 등을 통해 사회·지역 불평등 완화를 추진

○ 정부는 ① 신실크로드 개발, ②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공동 개발 ③ 장강 경제벨트 구축 등 3대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서부 및 중부지역 등 성장 소외지역에 대한 개발 및 지원도 강화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임.

---

5) 협정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의무(내외국인 차별금지)

6)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자 투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외자 도입을 금지하거나 외자의 투자 비율에 제한을 두는 산업 리스트를 뜻함.

7) 육상 교통로(실크로드 경제지대, 一帶)와 해상교통로(21세기 해상실크로드, 一路)를 결합한 거대경제권 개발 계획으로 일대(一帶)는 중서부 개발과 중앙아시아 진출, 일로(一路)는 중국 남부지역 개발과 동남아 진출의 연계로 해석됨.

8) 2013년 10월, 리커창 총리가 중국-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진입허가 요건 완화를 위해 2002년 기체결된 중-아세안 FTA 심화 협상을 제안한 이후 현재 협상이 진행중임.

○ 노인보험 제도 개선, 사적연금 개혁, 의료제도 개선, 실직자들을 위한 연간 의료보험료 지원한도 상향(320위안→380위안), 산업재해 보험 확대 등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함.

○ 소수민족교육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장애인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제공, 대학생 창업 지원, 도시 이주민에 대한 직업교육 실시,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및 실업급여 제공 등을 추진함.

○ 삼농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 대규모 곡물생산 지역에 대한 보조금 증액, 농촌지역의 도로 재건사업 실시 등을 통해 농업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생태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등 환경보호 방안 수립

○ 수자원 보호,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규제 시스템 마련,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 환경부담금 도입 등으로 생태개선 및 환경보호 방안을 마련함.

○ 에너지 과소비 업종에 대한 규제 실시, 석탄 소비감축 계획 수립, 대체에너지 마련, 에너지 보전·감축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실시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 절감을 추진함.

○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토지 및 수자원 오염 방지, 석유·가스 정제시설 현대화, 저연비 자동차 사용금지, 광업에 대한 규제 및 녹색화 사업 실시 등 포괄적인 환경보호 규제방안을 마련함.

- 특히, 산림재건 및 생태환경 복원사업 등으로 2015년에 66.7만 헥타르에 달하는 경작지의 산림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6백만 헥타르에 달하는 녹지가 새롭게 조성될 예정임. 또한 탄소배출권 제도의 시행, 2015 세계기후총회 참석 등으로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Ⅳ. 2015년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소와 정부의 대응

□ 주요 경기하방 리스크 요소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림자 금융 및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세 둔화는 불가피[9]할 전망

○ (부동산 경기) 부동산 과잉투자, 경기부진, 신용공급 규제, 주택재고 과다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 판매 부진으로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개량사업 추진, 주택대출금리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고, 2015년 3월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향조정, 거래세 면제요건 확대(보유기간 5년→2년)를 골자로 하는 주택구입 규제완화 대책을 추가 발표함.

  * 주택담보대출 비율: 신규주택 구매자(70%→80%), 1주택 보유자(30~40%→60%)

- 가계부채 및 담보대출의 비중이 낮아 향후 부동산시장 붕괴가능성은 낮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건설업 부진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림자금융) 제도권 금융에 대한 규제로 담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피현상[10]이 발생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림자금융 활용도가 상승하였음.

- GDP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이 낮고 은행총자산이 풍부하며, 2014년 정부의 규제 강화로 사회융자총액 대비 그림자금융 비중이 감소하였음[11]. 더욱이, 이번 전인대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세금감면, 수수료인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림자금융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전망임.

○ (지방정부 부채) 과도한 인프라 투자, 불균형적 세원 배분 등에 따라,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잔액은 2008년 5.6조 위안에서 2013년 6월말 17.9조 위안으로 급증하였으며, 인프라투자 및 토지수용에 지방부채의 약 80%를 지출해 부동산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짐.

---

9) IMF는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8%로 전망함.

12) 2014년 3/4분기 현재, 중국 소형기업 대출규모는 14조 5,500억 위안으로 전체 기업대출규모 49조 1,554억 위안의 29.6% 수준에 불과하나 정부가 민간자본의 은행설립 허가('13.7), 외자은행의 중국내 영업 장벽 완화('15년 초 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11) 2014년말 사회융자총액 중 그림자금융 비중이 2013년(29.9%) 대비 축소된 17.7%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1월 그림자금융 증가규모는 2,806억 위안에 불과하여 전년 동기(9,932억 위안) 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관리 강화 종합대책('14.10)을 수립하고 자금조달, 채무책임, 채무상환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음.

- 단기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인프라투자 증가율 둔화로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중고속·지속성장을 위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산업고도화 추진

○ 최저임금 상향, 저소득층 지원,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에 따라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2011~2014년 1인당 가처분 소득과 소비지출이 각각 연평균 9.8%, 9.6%씩 성장하였으며, 한계소비성향도 2010년 0.62에서 2014년 0.82로 증가함. GDP 대비 최종소비 비중은 2010년 48.3%에서 2015년 56.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과잉 생산설비 산업(알루미늄, 철강, 판유리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한편, 신에너지 산업, 친환경 자동차, 최첨단장비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육성 정책도 지원하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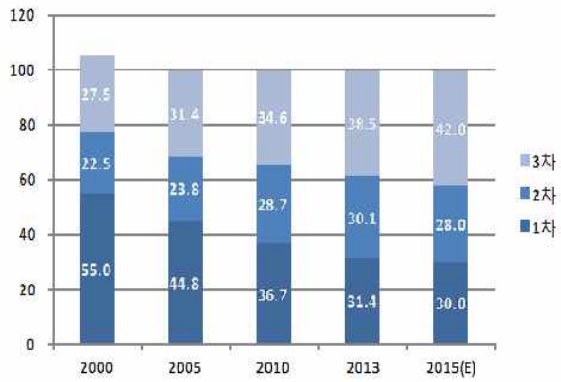
- 또한 금융, 의류, 물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유무역 시범구(상해, 광동 등) 확대 등에 따라 중국 서비스업의 산업별 고용비중이 2000년 27.5%에서 2013년 38.5%로 상승하였으며 2015년에는 동비중이 4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4> 주요 산업구조조정 정책

연도	산업정책
신흥산업	- 2030년까지 신에너지, 우주항공 등 7대 기초과학 분야 육성계획 발표('13.4)
산업구조 조정	- 철강, 조선 등 9대 산업분야 구조조정안 발표('13.1) - 과잉설비 규제안 발표('13.10)
친환경 산업	- '17년까지 친환경(신에너지) 자동차 구입세(판매가의 10%) 감면 및 '16년까지 관용차 비중 30% 이상 확보('14.7)

자료: 국무원, 국가발전개발위원회(NDRC), 중국공업정보화부, 현대경제연구원

<그림 1> 중국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



자료: 국무원, CEIC, 현대경제연구원

Ⅴ. 시사점

□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리스크 분산을 위한 수출기업의 수출대상국 다변화 및 소비재 중심의 수출촉진 전략이 필요함

○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11년 만에 최저치인 7% 내외로 설정하면서 중속성장 시대로의 진입을 공식 선언함. 이에 따라, 중국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 다변화를 통해 기업의 리스크 분산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2014년말 기준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제2위 수출대상국인 미국(12.3%)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이번 전인대에서 내수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강조한 점을 감안하여 소비재 중심의 수출촉진 전략이 필요함.

- 특히, 서비스산업과 의료, 친환경, 주거, 문화사업 등 신산업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동 산업에 투자 및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함.

- 또한, 환경 관련 규제 강화는 천연가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플랜트 수출 기업, 공기청정기, 친환경 제품 제조 기업에게는 수출확대 기회로 작용할 전망임.

□ 중국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진출 지역 확대, 적극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설비 확충 등이 필요

○ 서부지역 및 중부지역 개발, 신도시화 계획 등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상해,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 대해 편중되어 있는 우리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정부의 전략적 지역개발 정책에 따라 철도, 도로, 항만, 물류시스템에 대한 투자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전인대에서 중앙정부는 4,776억 위안을 중서부지역의 철도, 주요 인프라산업 등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동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 전략 실행,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이 요구됨.

- 기술적 경쟁력 유지를 위해 R&D 투자에 적극 나서야하며, 철강, 알루미늄 등 중국의 과잉 생산설비 산업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신제품 개발, 중국내 영업망 확충, 제조원가 감축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리커창 총리가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환경보호법 집행 강화 등 정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의 환경오염 방지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현지 진출 기업들의 환경보호 관련 설비투자비 및 오염배출비용 증가 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發 금융리스크 확대에 따라 기업의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지속적인 환위험 관리 등이 요구됨

○ 정부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강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모 제한, 지방정부 부채 관리 강화 종합대책 수립 등 그림자금융 및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중국發 금융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전판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중국의 금융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 급격한 환율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파생상품 활용, 환율변동보험 가입 등 환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함.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1팀
조사역 박두정 (02-6255-5709)
pdj@koreaexim.go.kr

< 참 고 문 헌 >

전국인민대표대회(NPC), 2015년 국민경제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 2015.3

_____, 2015년 정부업무보고, 2015.3

_____, 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 2014.3

_____, 2014년 정부업무보고, 201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5 중국 전인대에 나타난 경제 운용 방향, 2015.3

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양회(兩會) 이후 경제 향방, 2015.2

한국은행, 2015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평가, 2015.3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과 시사점, 2014. 12.

_____, 중국의 4대 금융리스크 현황과 평가, 2014.6

중국 인민은행 (http://www.pbc.gov.cn)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http://www.ndrc.gov.cn)

중국 공업정보화부(http://www.milt.gov.cn)

중국 경제 데이터베이스(http://www.ceicdata.com)

국제통화기금(http://www.imf.org)

CIA Fact Book(http://www.cia.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